민주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경선방식·시기 제각각 왜?

■광주시장 후보 ■전남지사 후보

	박광태	강운태	양형일	이용섭	전갑길	정동채	박준영	주승용	이석형
방식	국민참여경선	완전 국민참여경선	시민공천배심원	시민공천배심원	국민참여경선	시민배심원제	여론조사만으로	도민+당원 직접투표 여론조사 비율 낮춰야	도민+당원 직접투표 여론조사 비율 낮춰야
시기	4월 11일	4월 11일	4월 11일	4월 11일	4월 11일	4월 11일	3월 28일	4월 10일	4월 10일
이유	"외부인이 광주시장후보 고르는건 문제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 최대한 수렴"	"시민배심원제에 일정부분 시민의견 반영 필요"	"전문가 집단 통해 능력·도덕성 검증해야"	"시민배심원제는 중앙당 입김 우려"	"변화·혁신 위해 필요 다만, 평가기준 확실해야"	"체육관 경선은 구시대적 폐해 많다"	"후보토론회 거치려면 촉박-여론조사 현직에 유리"	"현직 프리미엄 최대한 줄여야"

유·불리 따져 시민배심원제 이해대립

"부작용 우려" "후보 검증 필요" 팽팽

박준영-주승용·이석형 경선일 신경전

민주당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 방법과 시기에 대해 각 후보들의 입장이 제각각이다. 경선방법에 따라 각 후보들에게 유불리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민주당 주류 측은 개혁과 혁신을 위해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어떤 식으로든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일부 후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전남도지사 경선의 경우도 경선방법과 경선날짜를 놓고 후보 간 입장차가 크다. 광주시보다 면적이 넓고 인구 수도 많은데도 경선날짜를 광주시보다 2주 먼저 앞당겨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

◇'시민배심원제' 부작용 우려=민주당 광주시장 입지자 6명은 정확히 반반으로 나눠 국민(참여)경선과 시민배심원제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은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은 당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러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운태 의원은 유권자면 누구나 경선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완전 국민경선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이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치러질 경우 그 바람이 수도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생각이다. 또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이 국민(참여)경선을 선호하는 이유는 광주시장 후보를 결정하는데 시민과 당원이 배제된 경선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원을 제외하고, 시민을 외면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인 정당정치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는 시민배심원제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 반대하고 있다. 중앙당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광주 사정을 잘 모르는 다른 지역의 배심원이 시장 후보를 뽑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시민배심원제도가 도입될 경우 그동안 자신들이 다져온 지지기반과 조직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광태 시장은 "시민배심원제도가 참신하지만, 시민과 당원을 배제한 채 진행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갑길 예비후보도 "시민배심원제도가 좋은 제도이긴 분명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선거문화에는 맞지 않다"면서 "특히 시민배심원제도는 중앙당 지도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등 공정한 경선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운태 의원은 "중앙당 결정에 따르겠지만, 광주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시민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시민의 뜻이 반영되는 통로가 적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세균대표, 박주선 최고위원 등이 광주시장 경선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연합뉴스

◇후보자 검증 필요하다=이용섭 국회의원과 양형일·정동채 예비후보는 각 후보들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공천 방법인 시민배심원제도가 가장 올바른 경선 방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양형일 예비후보는 '시민배심원제도+당원 전수조사'에 시민의견이 좀 더 수렴될 수 있는 경선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여론조사에서 중위권을 달리는 후보군으로, 시민배심원제도가 낮은 인지도와 지지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용섭 의원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2~3일 동안 후보들에 대한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해 후보를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동채 후보는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는데 찬성하며 후보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각각 말했다.

◇"경선 날짜 미뤄야"=민주당은 전남지사 경선을 3월28일, 당원과 비당원 50%씩 국민참여경선으로 실시한다고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선 날짜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인지도가 현역 지사에 비해 떨어지는 후보가 도민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진다고 반대하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과 이석형 전 함평군수는 "전남도민들이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경선을 해야 하지만, 3월 28일 경선의 경우 후보자 공모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져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선 방법을 놓고도 박준영 지사는 체육관 경선의 '동원 폐해'를 우려하며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을 주장하는 반면, 주 의원과 이 전 군수는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는 것은 인지도가 높은 현직에 대한 이중 특혜를 주고 도전자들에게 높은 철벽을 세우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선거인단의 직접 투표만큼 민심과 당심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체육관 경선을 선호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장 입지자들은 중앙당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4월10일의 경선날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당 외부인사 6명 포함 15명

민주 시·도당 공심위 구성…전남도당은 13명

오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공직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간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4일 광주지역 국회의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공심위를 구성했다. 시당은 이중 시민단체·여성단체·학계 등 외부인사 6명을 포함시켰다.

이날 위촉된 공심위원은 위원장에 김동철 광주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박주선·조영택·김영진·강기정·김재균 국회의원과 이윤정 남구지역위원장, 유동국 강운태 국회의원 보좌관, 이갑영 광주시당 상무위원,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김행자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 김태봉 변호사, 김경신 광주전남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안진 전남대 교수, 노미덕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등 15명이다. 광주시장 출마 예정인 강운태 의원과 이용섭 의원은 배제됐다.

이에 앞서 전남도당도 김효석 도당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공심위를 꾸렸다.

공심위원은 유선호·박지원·최인기·서갑원·김영록 국회의원과 박해숙 전남도의원, 김영동 도당 사무처장, 이근배 여수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강화자 장성군의원, 최설희 고흥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유도희 여수YMCA 이사장, 나인형 광주여성가족센터 소장 등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광주시당 공심위원

직책	이름	경력
위원장	김동철	시당위원장/국회의원
위원	박주선	최고위원/국회의원
	조영택	국회의원
	김영진	국회의원
	이윤정	지역위원장
	강기정	국회의원
	김재균	국회의원
	유동국	강운태 국회의원 보좌관
	이갑영	민주당 광주시당 상무위원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김행자	(사)광주시여성단체협회장
	김태봉	전 광주 YMCA 이사장
	김경신	광주전남시민단체협 공동대표
	안 진	전남대 법대 교수
	노미덕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민주당 전남도당 공심위원

직책	이름	경력
위원장	김효석	도당위원장/국회의원
위원	유선호	국회의원
	박지원	국회의원
	최인기	국회의원
	서갑원	국회의원
	김영록	국회의원
	박해숙	전남도의원
	김영동	도당 사무처장
	이근배	여수을지역위 사무국장
	강화자	장성군의회 의원
	최설희	고흥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유도희	여수YWCA 이사장
	나인형	광주여성가족센터 소장

'토론회 성적'만으로 후보 뽑는다고

시민배심원제 도덕성 등 배점 기준 마련 제기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도입되는 민주당 경선은 '토론회 성적'이 후보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 여론 등을 감안한 당선가능성, 당 기여도 및 정체성, 행정 능력 등 자질, 도덕성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민주당 통합과 혁신위원회 간사와 지방선거 기획본부 경선 관리를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에 구체적인 분야별 배점 기준은 현재까지 없다"며 "전문 배심원 가운데 선정된 패널들과 후보들의 토론회 과정을 지켜본 배심원들이 투표를 통해 후보를 선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후보와 관련된 자료는 배심원들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어떠한 선입관도 없는 상태에서 토론회 과정을 보고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민공천배심원제를 통한 후보 선정은 경우에 따라 당심과 민심에 일치하지 않는 의외의 후보가 선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배심원들이 후보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몇 시간 토론회로 최종 후보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한편, 시민공천배심원제 운용 방법과 관련, 민주당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평가 및 배점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당선 가능성, 당 기여도, 정체성, 도덕성, 자질과 비전 등에 대한 확실한 평가가 있어야 배심원단의 배점 기준이 있어야 후보 선정 이후 논란이 없다는 것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ngju.co.kr